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	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실	배포일자	2021년 5월 7일(금) 총 6매	담당자	• 미래균형팀장 남정선 ☎440-2391 • 담당자 강윤정 ☎440-2392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‘인구정책 TF’ 본격 출범
- 주택·직업 등 사회적 요인에 집중한 핵심 인구정책 발굴 -
- 변화된 인구구조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 정비 추진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**실효성 있는 핵심 인구정책을 발굴**하기 위한 ‘인구정책 TF’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.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‘인구정책 TF’는 앞으로 인천시의 인구증감 원인분석, 인구 정책의 개발·평가 등을 총괄하게 된다.

인천시는 2010년대 초·중반 모든 특·광역시의 인구감소가 진행된 상황 속에서도 **유일하게 인구증가세를 유지**해 왔고,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서도 2035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.

* 다른 특광역시 인구 변곡점 : 서울 2011년, 부산 2010년, 대구 2010년, 광주 2015년, 대전 2015년, 울산 2016년
(상승 후 하락한 경우는 최종 하락한 지점을 변곡점으로 보았음)

그러나 **작년부터 인천시의 인구가 감소***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, 전국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실제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천시의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했다.

* 주민등록인구 : ^(19년)295.7만 명 → ^(20년)294.3만 명, 전년 대비 △0.48% 감
** '20년 인천의 총인구 : 301.1만 명 (주민등록인구 294.3만 명, 등록외국인 6.8만 명)

시는 최근에 정리한 ‘인구감소 원인·예측 분석과 대응방향’ 보고서에서 현재 나타나는 **인구 감소의 핵심요인은 주택공급 등 사회적 요인**에 있다고 보았다.

2017년~2018년에 걸쳐 약 2만 호 내외였던 주택준공실적*이 2020년 약 1만 1천호까지 줄어들었고, 원도심 재개발 등에 따른 주택 멸실**도 2017년 약 2천 8백 가구에서 2019년 약 8천 2백 가구까지 약 3배가량 증가했다.

* 주택준공실적(단위:호) : ^(17년)19,686→^(18년)20,720→^(19년)13,679→^(20년)11,429 <국토부, 주택건설실적>
** 주택멸실현황(단위:호) : ^(17년)2,782→^(18년)6,433→^(19년)8,181 <국토부, 주택보급률>

그러나 시는 2022년과 2023년 **검단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물량***이 각각 약 4만호로 2020년의 세 배 수준에 이름에 따라 **2022년부터 인구 증가세가 회복**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* 공동주택 분양계획(단위:세대) : ^(21년)16,477→^(22년)40,411→^(23년)39,273 <인천시 건축계획과>

직업적 요인에 의한 인구 유출입은 매년 변동성이 매우 크고, 관련지표와의 상관관계도 부족해 예측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.

그러나, 시는 청년층의 유입이 향후 결혼·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**청년층의 인구증가가 인구정책의 중심**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.

이에 **인구정책 TF의 내실 있는 운영**을 통해,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,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주택 정책 등 **핵심정책을 발굴**한다는 계획이다.

한편, 시는 인구 감소로 ‘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’에 따라 7월 중 2개 실국을 감축할 계획이다.

시는 이는 실국 체계의 조정일 뿐 기존 부서는 그대로 유지되어 정책이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. 오히려 시는 향후 확대되는 기능으로의 인력투입과 효율적 조직운동을 위한 기회로 보고,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감축해야 할 기구와 증설해야 할 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다.

인구정책 TF 간사를 맡고 있는 박재연 시 정책기획관은 “실국수가 줄어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 본다”며 “이번 기회가 오히려 인천시가 필요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유를 확충하고 더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”고 밝혔다.

“더욱 중요한 것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유입한다는 중장기적 방향 하에 인천시의 경제 활력과 장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계층의 유입을 어떻게 유도할까”이며 “이러한 방안을 찾는데 TF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며 계획을 말했다.

<붙임> 인구감소 원인·예측 분석과 대응방향(요약)

붙임 인구감소 원인·예측 분석과 대응방향 (요약)

1 인구감소 원인과 전망

① 원인 및 향후 전망

- (감소원인 정리) 출산율 감소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감소가 계속 되던 가운데 이를 상쇄해주던 주택공급량이 '19년~'20년 사이 대폭 감소
- (향후전망)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, '21년 감소세 지속, '22년 반등 전망

연도	자연적 요인	사회적 요인	전망
'21년	·자연증가가 자연감소로 전환↓	·공동주택 준공실적 감소↓	↓
'22년	·코로나19로 혼인·출산 연기↓	·'22'23년 각 4만여호 공동주택 분양계획↑↑	↑

② 자연적 요인

- (자연증가) '20년 인천의 자연증가는 362명으로 '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, 전년(3,391명) 대비 큰 폭(△3,029명)으로 감소함

☞ '21년에는 자연증가가 자연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

< 인구동향 >

(단위: 명)



※ 출처: 통계청, 「인구동향조사」 / '20년 자료는 잠정치

- (혼인) 인천의 혼인 건수는 '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'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폭 감소 → 출산율에 악영향

☞ **코로나19에 따른 결혼·출산 지연으로 자연감소 현상 지속 예상**

< 혼인 현황 > (단위: 건)

구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 ^P
혼인 건수 (전년 대비)	17,118	16,092 (1,026↓)	15,235 (857↓)	14,850 (385↓)	13,401 (1,449↓)	11,576 (1,825↓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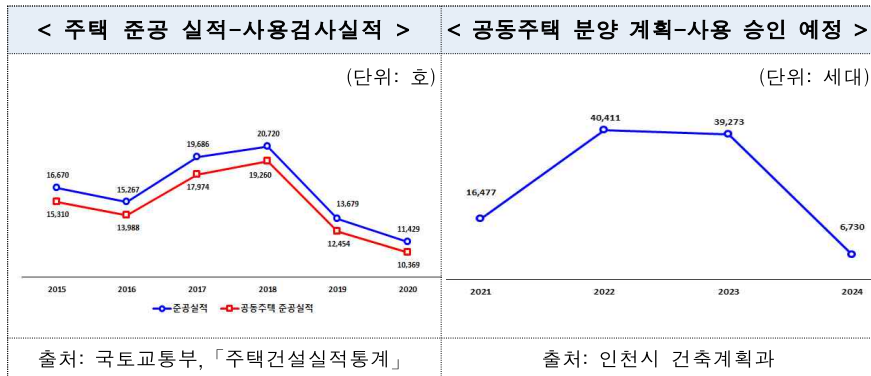
※ 출처: 통계청, 「인구동향조사」

③ 사회적 요인

- (주택) 인천의 주택 요인 순이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순유입을 보이다가 '20년에 순유출로 전환

※ ('18년) 3,826명 → ('19년) 5,380명 → ('20년) △491명

☞ **'19~'20년의 공동주택 준공실적이 '18년도의 절반 수준이었으나, '22~'23년 분양계획이 크게 증가하여 인구 유입 가능성 높음**



- (직업) 인천의 직업요인 순이동 자수는 기존 주요 통계(사업체 조사 등)와의 상관성 부족으로 예측 곤란

④ 시사점

- 자연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요인에 집중할 필요
 - ①주택 공급, ②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인구증가에 결정적 요인
 - 전국적인 저출산 추세 속에서 인천만의 출산 장려책으로 인구를 높이는 것은 사실상 한계
- ☞ **일자리와 주택 정책을 통해 청년층 이탈 방지, 청년층(신혼부부) 유입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**

2 인구대응정책 발굴계획

① 추진체계: 인구대응정책 TF 운영

- (구성) 행정부시장(단장), 기조실장(부단장), 분야별 실국장, 전문가
- (운영) 4월부터 운영 개시, 주요 사업 내년 예산 반영 목표로 운영
 - ※ 중장기 사업 발굴과 모니터링을 위해 내년 예산 반영 이후에도 지속 운영

② 인구동향 모니터링 실시

- 데이터혁신담당관에서 인구이동 주요 요인을 매월 측정하여 월보 작성 ⇒ 인구추이와 변동 예측에 활용
 - 사회적 요인: 공동주택, 일자리, 외국인 등
 - 자연적 요인: 사망자, 출생, 혼인건수 등

③ 인구 정책 발굴

- (추진방향) ①정부방향에 맞춘 정책 발굴, ②자연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초점, ③실효성 있는 소수의 정책 발굴에 집중
- (핵심인구 정책 발굴) ①실국별 토론*을 거쳐 과제 제출 → ②부시장 주재 TF에서 논의(공무원+전문가+시민) → ③'22년도 주요 예산 사업으로 반영

* 작년 인천연구원 분야별 인구정책 연구자료 참고 및 국내외 관련 정책 벤치마킹